

풍전등화, 대학가를 바라보는 어떤시선

한국대학신문 편집국장
윤 지 은



대학들의 현실이 참으로 녹록치 못하다. 지난 MB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이 이번 정부에서 더욱 심히 대학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대학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식지 않는다. 구조조정의 여파는 학생들까지 움직이게 하고 있다. 반강제 정원감축은 학과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하루 아침에 학과가 없어지게 생긴 학생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적어도 현재 들어온 학생들만이라도 해당 학과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문들도 달갑지 않다. 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졸업한 학과가 사라지는 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학교는 난감해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학생들도 교수들도 동문들도 반대하는 통·폐합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다고 대학들은 푸념한다.



[지난 3월 28일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노석균 영남대 총장, 김병식 초당대 총장 (제공: 한국대학신문)]

는 반강제적인 정원감축정책이 구조개혁평가를 비롯 재정지원사업선정까지 고스란히 연계되기 때문이다. 정원감축 없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정부가 보기에는 일종의 편법, 꼼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항변한다. 정부의 구조개혁평가 중 정량평가 지표의 경우 다른 대학과 견주어 떨어지면 안될 것 같아 수치에 손을 댄다는 것이다. 사례는 수도 없다. 취업률, 충원률이 대표적이다. ‘대학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대학은 오래 전 이미 상아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렸고 이젠 정직한 지표제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소연한다. 정직한 대학들만 ‘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기도 했다.

취업률은 과연 온전히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학들은 할 말이 많다. 경제가 추락하고 불황은 계속되며 기업은 정보화와 기계화로 과거에 비해 노동력을 활용하는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부의 인력수급정책도 실패했다. 총장이고, 교수들이고, 직원들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취업을 위해 뛰어다녀야 하고 그마저도 힘에 부쳐 결국 학생들을 편법 취업시기기에 이르렀다.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그다지 좋게 느껴질 리 없다. 물론 자신의 취업을 위해 함께 뛰어주는 총장, 교수, 직원들의 정성이 고마운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고 직업이라면 말이다. 적성에도, 눈높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5.31 교육개혁이 지난 1995년 단행된 것이니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당시 개혁의 목표에는 자율성과 다양화가 대전제로 있었다. 1기 교육개혁위원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개혁은 그러나 정부가 바뀌어오면서 점차 퇴색되고 말았다. 지난 MB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대학 자율성 제고를 강력히 천명했지만 정책은 정반대로 었나갔다. 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낯선 칼날이 대학들을 견주었다. 현 정부에도 그 칼날은 날을 더욱 세우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의 잣대는 대학들의 다양성을 외면했고 설립별, 소재지별, 규모별 상이한 환경, 특수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단순히 불평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지난 5월 9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결의대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에도 맞지 않은 기업에 무작정 떠밀린 학생들은 석 달도 못 가 그만두기 일쑤고 더 큰 좌절에 빠진다. 교수가 달래도 보지만 학생들은 그저 그런 상황들이 싫게만 느껴질 것이다.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교수님 자식이라도 그러라고 하실거냐”고 되묻는다. 더 이상 할말이 없어 지는 것이다.

교수들이 지난 6월 16일 한국대학학회를 출범시켰다. 올 초부터 교수들이 전국을 돌며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그 기반을 닦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의 목표인 경쟁력 강화와 교수들의 연구 교수권,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서 방점은 자율에 찍힌다. 교육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학과 대학교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학회는 정부가 대학을 기업처럼 ‘조정’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교수들이 직접 나서 대학체제를 분석하고 전망해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수들 뿐만이 아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도 나섰다.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 단체 역시 교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모여 일방적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고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부의 대학 장악으로까지 의심되는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학계가 나선다면 여론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환영이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나오는 정부 구조조정정책의 대안 중에 그나마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방법은 국립대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사립대의 특성화다. 즉 서울대 중심의 국립대 지원책을 전국 각 지역 국립대로 확대·강화해 전국에 서울대 같은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를 만들고 이들이 인문·사회·예술, 기초과학 등과 같은 취업률에 얽매어서 구조조정 당하기 쉽지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 바탕

이 될 학과들을 맡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다. 국립대가 갖춰야 할 책무성의 측면이다. 대신 사립대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을 더욱 강화해서 특성화를 가속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근 한국대학신문이 5.31 교육개혁 20주년을 앞두고 향후 20년을 위한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 패널의 발언을 들어보자.

“현재와 미래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 개의 축이 있다. 정부의 의한 평가, 시장에 의한 평가,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그것이다. 이 때 어느 한 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맞출 때 제대로 된 평가와 책임이 가능하다.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 중심으로만 편하게 흘러갔던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돌려놓았고, 대학정보공시제도 등이 만들어지면서 책무성을 강조하는 토대를 다졌다. 문제는 정부가 교육 자율성과 시장에 의한 통제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모든 기준을 만들어놓고 평가하고 모든 재정지원까지 정부 평가와 연계한다는 점이다. 즉 모양만 자율적 평가 체계라는 얘기다. 최근 고등교육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1960~70년대 관료적 통제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어설픈 관치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태가 오지 않도록, 소위 관치에 의한 평가를 자제시켜야 하지 않을까.”

시장에 의해 자연적으로 대학이 도태되어 퇴출되도록 하는 방식은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 정부에선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구조조정이 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시장을 무시하고 정부에 의한 일



[국·공립대 교수들이 지난 6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립대 살리기 전국 교수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병문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전남대 총장, 사진 첫째줄 오른쪽)이 동참했다. (제공: 한국대학신문)]

방적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이 추진된다는 점에선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수단, 방법, 절차에서 무리가 따르면 어김없이 부작용이 온다는 그간의 많은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무성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전제와 함께 책무성은 이들 두가지 큰 축과 반드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개념이다. 그 아래를 주춧돌처럼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간 대학들에게 정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이 다함께 큰 목소리로 책무성을 요구해온 게 사실이다. 우선 일부 사학들의 비리, 횡령으로 전체 사립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교수들의 철밥통 문제, 법인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무방기, 대학들의 지나친

등록금 의존성, 과도한 건축적립금 등이 질타를 받으면서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온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교육열, 그것이 순수한 학구열이든 학벌사회가 만든 과도한 집착이든 이러한 교육열을 채우기 위해 ‘누구라도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학의 양적 증대가 이뤄졌고,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대학을 나와도 뭘 할 줄 모르더라”는 기업의 반발에 더해 가정의 경제를 압박하는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제불황이 이어지자 대학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학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고민하고 귀를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학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규제는 강화됐고 불신은 공고해졌다. 그러면서 소위 구조개혁이든 구조조정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간에 정부가 칼을 들이대고 나선 것이다. 온전히 대학의 책임이라 하기에는 환경, 상황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학이 스스로 뼈를 깎겠다는 변혁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진정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방패삼아, 교직원들의 생존권을 방패삼아 학교를 더 이상 난도질하지 말라고 한들 그 목소리가 무슨 힘을 받겠는가. 정부도 대학정책에 있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겠지만 그것을 요구하려면 대학들 역시도 본분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대학의 목소리에 여론이 귀 기울여 줄 것이다. 정부의 대학을 향한 칼날에 여론이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를 찾아가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대학 교수들은 기업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이, 기업과 대학이 교육의 질, 인재의 질, 사회의 질을 높이는 데 다같이 힘을 모은다면 분명 우리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윤 지은 | 한국대학신문 편집국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동대학원 교육학 석사. 한국교육개발원, SK텔레콤 홍보실을 거쳐 한국대학신문 평가전문기자,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 정책연구 「기업 CEO의 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2004),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 조사」(2004) 등에 연구자로 참여했으며 한국경제,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에 전문가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